

코로나19 하에서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지금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정책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 우파 정치세력의 수장이라 볼 수 있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된 기본소득에 대해 ‘꼭 고려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물론, 시장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영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유로 금세 기본소득을 제도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집단면역의 구축’을 운운한 바로 얼마 후에 자기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어버렸던 존슨 총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은 영국에서조차 기본소득이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시장주의와 성과주의에 경도되어 왔던 미국과 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성향이 매우 강했던 나라들에서조차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원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팬데믹 경제위기 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정책적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

원금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학계 또는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지금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향후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세우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대중화해온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정책적 노력과 그 선도적 문제의식이 기본소득 논쟁의 정치적 확대재생산에 기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국내외 정세 전반을 고려해서 볼 때, 지금은 기본소득의 시대임에 틀림없다. 기본소득과 같은,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에 틀림없다.

기본소득의 지역화폐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소득, 즉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또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Seed Money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를 지역화폐로 지

급하자는 주장과 그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은 고조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또 유통되는 지역화폐가 그 지역 중소기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고용도 늘어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까지 늘어나게 하는 지역경제적 선순환을 이뤄냈다는 객관적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내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지역화폐로의 지급을 가장 먼저 시도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에 제2회 기본소득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에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세션을 편성하여 관련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우연히도 지역화폐를 연구해온 필자가 그 세션의 좌장을 맡았는데, 발제자였던 스페인의 수산나 마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박사가 소개한 기본소득의 지역화폐화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부 Eix Besos의 빈곤지역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B-Mincome’으로 불리는 기본소득의 25%를 그 지역에서만 발행, 통용되는 REC(Real Economy Currency)라고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 주민을 구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기본소득+지역화폐=지속가능한 지역 순환형 경제

그곳의 기본소득은 2018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기간은 약 1년 정도다.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한 것부터 관련 여러 정책적인 기획들을 주관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등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온 바르셀로나 시의회였다. 빈곤지역 600여 가구에 대해 매월 1,000 유로(약 140만 원)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그 중 25%는 13개월 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한화로 약 27.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돈이 지역 내에서만 돌고 도는 ‘종자돈’으로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지역화폐로의 지급 실험은 투입 예산이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즉 골목상권 승수효과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로화의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간 지역경제적 차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피폐화 일변도를 보여 왔던 빈곤지역 Eix Besos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접합된 정책적, 시민실천적 대응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고, 그들에 의한 고용이 늘어나며, 나아가 이 루트로 인한 주민 소득 증대와 기본소득 지급이 맞물리면서 빈곤 주민들의 실질소비능력이 탄탄해졌다. 그 결과, 다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었고 또 그 지역의 생산자들의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스페인 최악의 빈곤 지역에, 필자가 그간 강조해온 지역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즉 ‘지역순환경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듯,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조합은 놀라운 성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빈곤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또 그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시키게 되는 맨 처음의 과정은 공적자금 지원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지만, 그 후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지역경제 활성화 과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의해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의 자체적인 회복 루트에 의해 담보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가능성

바르셀로나 Eix Besos 지역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더 많은 사례들을 폭 넓게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접합이 초래하는 효과를 더욱 탄탄하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ix Besos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전 국민 또는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계획하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구상과 무려 그 발행량이 스페인 REC에 비해 무려 100배 이상이나 많은 우리나라 지역화폐 정책이 조합되면, 스페인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지금의 지역화폐가 경기, 인천, 군산, 포항 등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도를 구상하고 또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의 정책 대응은 정책 현실들에 대한 매우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화폐(Citizen Currency)로서의 지역화폐

단,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 세션 발제자 수산나 마틴 벨몬테 박사는 지역화폐의 영어표기를 ‘Local Currency’가 아닌 ‘Citizen Currency’로 사용했다.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이기 이전에 그 정책 프로젝트 전반에 시민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필자 역시 그간 지역화폐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화폐이어야 지역화폐의 발행량도 더 늘일 수 있게 되고 또 그 유통속도 역시 더 높일 수 있음을 강

조해왔다. 그는 스페인 북동부 지역 실험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정책이 ‘Co-Production’에 의해 기획, 추진, 관리된 것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지역화폐의 본질이 화폐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더 높이는 것에 있다는 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지역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점, 나아가 민과 관 간의 협치가 정책이 가야할 이상형(ideal type)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도에도 ‘Co-Production’은 반드시 키워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람들의 ‘필요’를 매개하는 지역화폐

또, 기본소득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은 보편성과 무차별성이다.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 맞춰 보편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와 같은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화폐 역시 그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대중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대다수가 지역화폐 제도를 알고 또 그 의의에 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지역화폐의 발행량도 또 유통속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이는 사실 지역화폐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민실천적 조건이기도 하다. 해서, 최근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그에 접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노동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 따른 소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지역화폐 역시 주민들 간의 ‘필요’를 매개하는 통화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개인이 상점가에서 자신이 충전, 구입한

지역화폐를 쓰고 나면 그 돈은 법정화폐로 환전되어 소진되고 말지만, 지역화폐의 원래 기능은 주민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것인데 특히 시장에서는 확보 또는 구입할 수 없는 사회 서비스, 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의 ‘필요’를 화폐 지급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이상형Ideal Type을 갖는 지역화폐가 기본소득과 접합될 때, 생존권 소득을 통한 국민의 ‘필요’ 충족은 더욱 다채롭고 동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화폐가 주민들 개인 간의 서비스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도 그 모습을 진화할 것을 기대해본다.